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1~1.17)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선언 등 日 정부 코로나19 대책 관련 평가

1. 긴급사태선언 후속 조치 부재

○ 위기관리의 핵심은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은 음식점 단축영업 등이 골자인 제한적 조치로,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추가 조치도 명확치 않음.

※ 스가 총리는 1.7 기자회견에서 선언 기간이 종료되는 2.7 시점까지 분과회가 제시한 스테이지3 상당까지의 상황 개선이 불가능할 가능성과 관련 '가정(假定)에 대한 답변은 자제하겠다' 고 언급

- (제한적 조치) 긴급사태선언 조치 당초안에는 백화점 및 오락시설도 단축 영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적근거가 없는 '단축영업을 요청한다' 는 표현에 그쳤으며, 음식점의 추가적 단축영업 및 휴업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었으나 구체적 움직임 부재

- (특조법 개정안 시행 2월 중순 이후) 日 정부는 별칙 규정이 담긴 특조법 개정안을 1.18 소집 예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나, 동 개정안이 2020.2월 초 국회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시행은 2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

· 한편, 日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백신 접종도 2020.2월 말 시작되어 전국민 접종은 2020.6월 경으로 예상

○ 일본에는 법제도상 도시봉쇄가 불가할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긴급사태조항' 도 존재하지 않고, 한달 뒤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효 방안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치가 인생에서 여러 승부수를 걸어온 스가 총리는 배수진을 치며 현재 상황을 타파하려는 모습임.

2. '감염방지와 경제·사회활동 양립' 전략 문제

○ 스가 총리가 취임 직후 감염방지와 경제·사회활동의 '양립' 을 정권 최우선 과제로 두었을 당시 각 언론사가 내놓은 내각 평균 지지율은 50~60%로 높게 유지되었으나, 11월 이후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Go To 트래블' 캠페인을 이어가며 야당 및 언론으로부터 감염확산의 주요인 이 동 사업이라는 지적을 초래함.(산케이)

- 日 정부는 1.25 이후가 '승부의 3주' 가 될 것이라 선언, 감염이 급확산되는 도쿄도에 음식점 단축영업을 요청했으나 고이케 도지사의 협력을 얻지 못해 신규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였고, 스가 총리는 '양립' 이라는 표현을 자제

- 이후 총리의 'Go To 트래블' 사업 전국 일괄 정지를 발표(12.14)는 '승부의 3주' 에서 패배했음을 의미

- 수도권 대상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따른 '한정적이고 집중적인 조치' 와 관련, 총리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음식점 단축영업 및 재택근무 추진 등 필수 조치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또한 경제와의 '양립' 을 중시한 데 기인한 결정으로 관찰

○ 도쿄모 인사이트 마케팅 제공 휴대전화 위치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선언 발령 이후 3연휴(1.9-11) 기간 중 대다수 행락지의 평균 체류 인구수가 지난해 선언 대비 대폭 증가한 바, 경제활동과의 양립차원에서 정책의 주안점을 맞춘 만큼 선언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음.(닛케이)

2.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추가 발령 방침 관련①

□ 日 정부는 1.13 개최될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에 오사카, 교토, 효고 3부현의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 추가 타당성을 자문한 뒤 국회 사전보고를 거쳐 대책본부서 정식 결정할 의향을 표명, 3부현이 추가될 시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지는 수도권 포함 7도부현(都府縣)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간사이 3부현의 신규 확진자수는 정부 분과회의 6개 지표 중 가장 심각한 스테이지4에 해당

※ 스가 총리는 1.12 오전 자민당임원회에서 ‘오사카를 비롯해 심각한 상황에 놓인 부현(府縣)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신속히 판단코자 한다’ 고 언급

- 한편, 오오무라 아이치현 지사, 후루타 기후현 지사는 금(1.12)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과 화상회의를 열어 두 지역 대상으로 선언 발령을 요청하였으며, 가바시마 구마모토현 지사도 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에 선언 요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규슈 각 현과의 연계를 감안해 의견 교환중’ 이라 밝히는 등 선언 발령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중인 바, 아이치, 기후 현도 대상지역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점임.

※ △도치기현: 3연휴(1.9-11) 기간 중 감염상황을 토대로 요청 검토, △이바라키현: 병상 가동률 60% 이상 초과 시 요청할 방침

- 단, 日 정부 내에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은 지역의 경제활동은 계속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선언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대한 신중론 존재

3.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추가 발령 방침 관련②

□ (발령지역 확대) 스가 요시히데 日 총리는 1.13 저녁 총리관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본부를 개최,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역에 교토·오사카·효고등 간사이 3현과 아이치·기후·도치기·후쿠오카 등 총 7개 부현을 추가할 방침이며, 추가 지역에 대한 발령 기간은 1.14-2.7까지로 할 예정임.

- 동 선언은 신종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에 기반한 것으로, 스가 총리는 1.13 오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 에 대상 지역 추가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국회 사전 보고 후 同日 대책본부에서 정식으로 발령할 예정

- 스가 총리는 동 선언 발령 후 기자회견을 개최, 대상지역을 추가한 이유 및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예정

□ (배경) 오사카·교토·효고 3부현 지사는 지난 1.9 의료제공체제 핼박상황 등을 이유로 정부에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으며, 1.12에는 아이치·기후·도치기 현지사도 대상지역 확대를 요청, 日 정부는 감염상황이 후쿠오카현에서도 악화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요청이 있었던 6부현과 함께

총 7부현을 선언 발령지역에 추가할 방침을 결정함.

- 1.13 오전에 개최된 후생노동성 자문위원회에서도 감염상황에 대해 ‘새해 이후 간사이, 북관동, 규슈, 주쿄(아이치현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 등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었다’ 고 분석

-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3 오전 중의원 내각위원회 폐회중 심사에서 ‘도도부현의 요청은 (발령)요건은 아니나, 의료상황이 핼박하다는 증거’ 라고 하며 ‘(감염상황이 가장 심각한 단계인) 스테이지 4 대책이 필요한 도도부현이 (현재 선언 발령중인) 1도 3현 이외에도 몇 군데 있다’ 며 지역 추가 필요성을 강조

* 내각관방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한 전체 입원자의 병상 사용률은 11일 현재 효고현 75%, 오사카부 70%, 아이치현 60% 등 핼박

□ (추가 이후) 추가 지역의 지사는 음식점·술집·노래방 등에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요청에 응한 점포에는 협력금으로서 1일 최대 6만엔을 지원할 예정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 규정은 없으나 점포명 공표 등이 가능함.

- 단,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향후 선언 발령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호쿠, 산인(山陰) 지역 등 감염확대가 억제되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할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4.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추가 발령 방침 관련③

가. 능력 대응·입장 반복 비판

- (정부측 능력 대응) 오사카·아이치·후쿠오카현 등 금번에 새롭게 발령된 지역에서 연초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점을 고려할시 발령지역 확대는 타당한 판단이나, 추가 발령 대부분은 지사측의 강력한 요청에 근거한 바 (정부측이) 선수를 빼앗긴 인상이 있음. (요미우리)

-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사람간 접촉을 80% 이상 줄이도

록 요구한 2020년 봄과 동일한 강도의 대책을 취하더라도 감염 억제에 2개월이 걸린다고 언급한 전문가도 있는 만큼, 기간 및 발령지역만을 정한 대책만으로 충분할지에 대해 더욱 시급히 효과를 판별할 필요 (마이니치)

- 신년 들어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재 목표치인 1개월 발령 기간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상정하고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조속한 대비가 필요 (아사히)
- **(야당 강력 비판)** 야당은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느장 대응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판, 1.18 개최 예정인 정기국회 및 2021.4월의 중참보궐선거까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전망이다. (닛케이)
 -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1도 3현 발령 당시에 간사이에 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언급했으며,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궁지에 몰려서 대책을 강구하는 느낌이다’ 고 비판
 - 닛케이신문이 2020.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의 현재 정당 지지율은 48%p로 야당보다 30%p 정도 앞서고 있으나,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시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
- **(입장 번복)** 스가 총리는 지난 1.7, 1도 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면서 선언 대상 지역 확대에 신중할 입장을 밝혔으나 1주일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움 (닛케이).
 - 특히 오사카부의 경우 스가 총리는 애초에 오사카부의 판단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단행, 감염이 억제되었다고 평가하여 긴급사태선언 발령 대상에 추가하지 않을 방침이었는데, 결국 추가하게 된 금번 대응은 임기응변으로 해석 (마이니치)
 - 스가 총리는 1.13 회견을 통해 감염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는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는바, 지역 실정에 맞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음식점 이외의 영향도 포함하여 원인을 조사한 후 대책에 활용할 필요 (닛케이)

나. 경기 하방리스크 우려

- 긴급사태선언 발령지역이 11개 도부현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요미우리, 아사히)
-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발령지역 확대에 대해 ‘외출 자속에 의한 소비 침체 및 점포의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연간 GDP의 0.4%에 해당하는 2.5조엔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
- SMBC닛코증권의 마루야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롭게 지역에 추가된 후쿠오카현은 규슈지역 경제의 중심인바, 소비 등에 미칠 하방압력이 크다’ 고 언급

다. 실효성은 여전히 과제

- **(이동 인파 여전)** 기존에 발령되었던 1도 3현에서도 2020년 봄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와 비교하여 주간 이동 인파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요미우리)
 - 현재 상태가 지속될 시 2.7의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발령중인 11개 도부현 이외에도 감염이 심각하여,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급하게 추가로 발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 언급
- **(메시지 명확성 부족)** 감염증 전문가 중에는 ‘(금번 선언과 관련하여) 오후 8시까지의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만이 강조되어 오히려 오후 8시까지는 (음식점에 가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는 지적도 존재함. (요미우리)
 - 또한 후쿠다 미쓰루 니혼대학 교수는 ‘지난번 긴급사태 선언시에는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작용,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으나 금번에는 중증화 위험도가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행동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있어, (정부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관심을 끌수 있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고 지적

5.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관련

- 영국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변이가 최소 50개국·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이 각국 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 관련 언론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일본인 34명 감염)** 日 국내에서 귀국자 및 밀접접촉자 총 34명에 영국* 등지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감염이 확인, 공항 검역을 빠져나간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전문가는 국경방역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경종을 울림(도쿄신문).
 - *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보다 전파력이 강하며,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킨 다른 확진자의 수)를 0.4 이상 높일 가능성(아사히)
 - 일본에서는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외 브라질變 귀국자에 새로운 변이 감염 확인되었으며, 2020.12.1. 이후 귀국자 중 약 70%에 해당하는 23명이 무증상
 - 한편, 일본 공항 검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변이 감염이 확인된 사례도 확인된 바, 전문가는 ‘국내에는 어느 정도(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있다는 전제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
 - * 오미 시게루 日 정부 분과회장 : ‘(변이) 유행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 **(日 정부, 국경방역대책 한계)** 日 정부는 2020년 가을 이후 해외 왕래 재개를 추진해왔으나, 변이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11개국·지역의 비즈니스 관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일시 정지하는 등 조치에 나서는 한편, 일본인 대상 검역 강화도 결정함(아사히).
 - 단,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국경방역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실시간 감시 및 정보수집 태세를 강화해 감염력 및 병원성 등 과학적 지견을 토대로 한 위험 평가가 불가결한 상황
 - 실시간 감염상황 감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감염증연구소와 도도부현의 위생연구소에서 각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게놈을 해석중으로, 2020.12월 말까지 약 1년 간 1.4만주(株)를 확인했으나, 이는 전체

확진자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연구에 주력할 필요

- 한편, 도시부를 중심으로 민간 검사업체가 취급하는 검체도 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쉬워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 日 국내 의료제공체제의 꺾박상황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방지와 더불어 최악의 사태를 시야에 둔 병상 계획 수정 및 인재 확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

6. 日 코로나19 백신 관련 동향

가. 日, G7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미승인 (닛케이)

- **(日, 임상실험 데이터 우선시)** 후생노동성은 해외 백신의 사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특례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조기 실용화 방침을 취했으나, 인종 및 민족이 상이해 약의 효력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관점에 입각, 임상실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 ‘승인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후생성)’ 며 임상실험 중시 방침을 고수중임.
 - 다무라 후생대신은 2020.12월 화이자 승인신청 접수 후 회견에서 ‘유효성, 안전성을 확실히 심사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가급적 조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외국에 비해 승인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도 안전성을 우선시 할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경우
 - 日 정부는 해외 백신 수입에 의존해 접종이 뒤처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도 부족한바, 백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재고해야 할 필요
- **(각사 승인 및 접종 개시 전망)** 화이자 백신 관련, 후생성은 일본인 약 160명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실험 등 주요 데이터가 2021.1월 수집된 시점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승인시기는 일러도 2월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의료종사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이므로 고령자 등 일반인 대상
접종 개시는 올 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英 아스트라제네카도 일본인 약 250명 대상 임상실험을 실시중이나,
국내 승인 신청 전망은 서지 않았으며, 1.20 200명 규모 국내 임상실험을
앞둔 美 모데르나 백신도 승인은 2021.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나.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 요미우리 인터뷰

- 다테다 가즈히로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日 정부 코로나19 분과회 위원)
요미우리 신문과의 취재에서 코로나19 관련 현황에 대해 논한바, 주요 내
용은 아래와 같음.
- (감염 위험 경계 필요성) 2020년 봄 감염확산 ‘제1파’ 당시 중국 및 미
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의료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일본에서
도 긴장이 증폭되었고, 국민 협력을 얻은 긴급사태선언 조치를 통해 확진
자가 급감했으나, 당시 확진자 수를 더욱 줄였더라면 ‘제2파’와 ‘제3
파’ 도래를 막을 수 있었을 것
 - 도쿄의 접대 제공 음식점이 감염확산의 발단이 되었던 ‘제2파’ 당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중증자도 비교적 적었으나, 겨울철 건
조한 대기와 낮은 기온으로 바이러스의 감염력 높아지며 확진자가 급증
한 결과,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중증화 사례가 늘어나며 의
료기관 압박 초래
- (日 국산 백신 개발 지체) 2019.12월 중국에서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 바
이러스는 2020.1월 일찍이 소유전자배열이 공개되어 美 모데르나의 시험
용 백신 생산 착수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백신 개발 가속화
 - 단, 10년 내외 소요되는 백신 개발기간을 극적으로 단축하며
2020.12-2021.1월 미국 및 유럽에서 승인을 얻어 접종이 본격화된 3개
백신*은 부작용 등 불확실 요소 有
 - * 美 모데르나 2020.3월, 美 화이자와 英 아스트라제네카는 2020.4월 각각 임상실험 개시
 - 한편, 일본에서는 벤처기업인 안제스가 2020.6월 임상실험에 착수해 현
재 同社와 시오노기제약의 백신이 임상실험 중간단계에 돌입했으나, 당

초 목표였던 올 봄 실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이이치산쿄, KM
바이오로지스도 2021.3월 경 임상실험 개시를 목표로 하는 등 미국 및
유럽에 비해 국산 개발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

* 닛케이는 후생성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보다 신중히 확인하기 위해 2021년 해외를 비롯한 합계
수만명 규모의 최종 임상실험 추가 실시가 결정된 것이 원인이라고 기술

7. 도쿄올림픽 개최 회의적 여론 우세

1. 도쿄올림픽 개최, 회의적 여론 우세

- (여론 80% ‘再연기·중지’ 요구) 日 교도통신이 1.10일 실시한 도쿄올림
픽 개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중지해야 한다’가 35.3%, ‘재연기해야
한다’가 44.8%를 차지,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도쿄신문이 1.12일 도쿄역 부근 행인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일
본의 예지(叡智)를 집결하여 빈틈없는 감염방지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
다’(효고현 회사원)는 의견도 있는 한편,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일본 전체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백신도 효과가 어찌될지 모르므로 개최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규
슈 간호사), ‘선수들로서는 아쉬울지 모르나, 목숨이 더 중요하다’(회사
원)는 등 개최 관련 부정적인 의견 다수
- 英 공영방송 BBC 보도에 의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디 파운드 위원조
차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
- (日 정부 등 개최 방침 고수) 부정적인 여론에도 日 정부 및 여당, 대외조
직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견인지 들어보고 싶을 정
도’라며 올림픽을 성사시키겠다는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스가 총리 역시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또한, 스가 총리는 백신 접종이 세계적으로 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발언을 한 바 있으며, 1.12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씨와의 전화회담에서도 ‘반드시 해 내겠다’고 강조
- 모리 요시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1.12일 교도통신 사내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연에서 이미 한 번 연기된 올림픽을 다시 1년 연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
- 그 이유로 개최준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위원회의 직원 대다수가 도쿄도 및 관계부처로부터의 파견자로, 이들의 파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으며 ‘돈의 문제는 아님’을 강조

2. 코로나 속 올림픽 강행, 장애물 산적

- (‘**無관객 개최**’ 등 **코로나대책 효과 의문**) 코로나 사태 하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개·폐회식 간소화, 無관객 개최, 선수들의 우선적인 백신 접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 방안의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음.
 - 무관객 개최는 도쿄도의회 오자키 하루오 회장도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해온 방안이나, 당시는 전국 1일 감염자 수가 1,000명에 달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올해 들어 3,000명을 밀둔 날이 없으며 1.7일에는 과거 최다인 7,533명을 기록한 상황이며,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 등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이종이 확인되고 있어 입국을 출전 선수에 한정한다 해도 日 국내 감염 리스크의 증대가 불가피
- (의료 인력 확보 난망)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경기장에도 의사 및 간호사가 필요하나 현재 입원처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자택요양을 하고 있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은 이를 위한 인력을 차출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
 - ‘의료관계자에게 올림픽 개최를 요청하는 것은 장례식 회장에서 결혼식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작년 봄경부터 준비해 감염을 억제했다

면 개최가 가능했는지도 모르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능할 리가 없다’ (우쓰노미야市 호흡기내과 원장) 등 의료현장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 방침 관련 비판 고조

- (국가대표 선정, 예선전 개최 불투명) 올림픽 개최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사태로, NHK 보도(1.2일)에 따르면 日 국가대표로 내정된 선수는 전체의 20% 정도에 그치며, 스포츠 전문 기고가 고바야시 신야 씨는 ‘해외에서도 결정된 선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IOC는 예선기간의 기한을 6.29일, 출전등록 기한을 7.5일로 설정하고 있으나, 반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세계 각국이 모든 대표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바야시 씨는 ‘(국가대표 선발) 대회는 조금씩 개최되고 있으며, 만약 코로나로 대회가 중지된다해도 그 시점에서 세계 랭킹 등에 근거해 대표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
 -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표 선발 방식이 될 경우, 형평성 관련 논란이 고조될 수 있으며, 일례로 현재 스포츠 클라이밍계에서는 국제협회 대표 결정 방침에 대해 일본협회가 불복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
- (‘**플랜B**’ 상정 필요) 올림픽에 정통한 나라여자대학의 이시자카 유지로 준교수(스포츠사회학)는 ‘정부 및 조직위는 개최를 강조하기만 할 뿐, 중지 및 재연기될 경우의 “플랜B”를 준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함.
 - 이시자카 준교수는 ‘작년 여름경에는 어느 정도의 관객이 가능할지 노후를 축적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도 무관객으로 개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 그러나 현재 수준의 감염확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며, 보통 이런 경우 개최는 무리다’라는 견해 제시
 - 또한, 올림픽 예선 일정이 정해지고, 각국의 참가상황이 전망가능한 올해 3월이 개최 판단을 내릴 하나의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日 정부는) 예선전 참가를 보류하는 국가가 속출하는 등의 외압으로 상황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치국으로서 중지한다는 말을 꺼

내지 못해, 스스로 선택하지 않기로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라고 비판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 총무성 2020.1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73,29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0.6% 증가, 명목 0.5% 감소(11개월 연속 실질 증가)
-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78,71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1% 증가, 명목 0.0%로 동일(2개월 연속 실질 증가)
 - 10개 항목 중 ‘의류·신발’ (-16.8%), ‘교양·오락’ (-9.4%), ‘기타’ (-1.6%)를 제외한 7항목 전년 대비 실질 증가 기록

<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1.7	4.9	10.6	10.8	-16.8	2.9	2.4	26.4	-9.4	-1.6

-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05,404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5%, 실질 1.6%로 감소(2개월 연속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 소비지출(89,301엔)은 4.3% 증가(4개월 연속 증가)
-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383,99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5%, 실질 -0.4%로 각각 감소(7개월 만에 실질 감소), ②흑자율은 20.5%로 전년 동월 대비 1.5%p 감소
 - ③평균소비성향은 79.5%로, 전년 동월 대비 1.5%p 증가 (계절조정치는 67.1%, 전월 대비 0.3%p 증가)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소

$$\text{비성향} = (\text{소비지출} / \text{가처분소득}) * 100$$

- (평가)** 11월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집콕 수요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 대비 축소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가전 및 가구, 식자재 및 인터넷 접속료 등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품목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11월은 감염 ‘제3파’의 양상이 뚜렷해진 시기이기도 했으나, 아직 정부의 ‘Go To Travel’ 캠페인 효과가 지속되었던 시기로 소비지출의 증가세를 지지
 - 또한, 1년 전인 ‘19.11월은’ 19.10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가 침체했던 시기였으므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서는 이에 대한 반동 효과 나타남
 - 항목별로는 ‘가구·가사용품’이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육류 및 야채 등 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며 ‘식료품’도 1.7% 증가
 - 한편, 11월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겨울철 의류 등 판매가 부진하며 ‘의류·신발’은 16.8% 감소
 -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再발령으로 향후 소비가 침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선언의 영향으로 소비는 당분간 저조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 제시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비·전월비·흑자율·평균소비성향(%)

	2019년		2020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득(실질)	1.9	-1.9	2.1	1.7	1.5	0.9	9.8	15.6	9.2	1.2	2.6	1.9	0.6
지출(실질)	-2.0	-4.8	-3.9	-0.3	-6.0	-11.1	-16.2	-1.2	-7.6	-6.9	-10.2	1.9	1.1
*전월비	3.2	-1.2	-1.6	-0.8	-4.0	-6.2	-0.1	13.0	-6.5	1.7	3.8	2.1	-1.8
가처분소득(실질)	2.7	-1.7	2.3	2.7	0.9	-0.6	13.4	18.9	11.7	0.8	2.9	2.6	-0.4
흑자율	32.4	36.8	35.3	33.3	37.0	39.3	46.8	48.3	43.4	36.0	32.1	33.2	32.9
평균소비성향	67.6	63.2	64.7	66.7	63.0	60.7	53.2	51.7	56.6	64.0	67.9	66.8	67.1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지출 전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 실질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을
 ***흑자율 및 평균소비성향은 계절조정치

9. 日 내각부 2020.1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체감경기 2개월 연속 악화)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10.1 하락한 35.5로 집계, 2개월 연속 악화
 -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가계동향(-11.4), 기업동향(-6.6)·고용(-8.3) 관련 지수 모두 악화
-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한 37.1을 기록, 3개월 만에 개선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약세가 보임’으로 판단을 하향수정했으며,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음’이라는 인식을 밝힘.
 - ※ 내각부는 경기 기조판단을 2개월 연속 하향수정, 6월에서 11월까지 유지해 온 ‘회복’이라는 표현 삭제
- **(언론 평가)** 12월 경기판단지수는 日 정부 관광지원책 ‘Go To Travel’ 중지의 영향 등으로 2개월 연속 악화, ‘20.5월 수준으로 하락함.

10. 日 재무성 2020.11월 국제수지(속보치) 결과

- 1. **(경상수지)** 일본의 20.11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1조 8,784억 엔을 기록, 무역수지 흑자폭 3개월 연속 확대(77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 전년 동월 대비 6,360억 엔 증가한 6,161억 엔으로 흑자 전환
 -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하며 흑자폭 확대

- 수입은 내수 침체를 배경으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를 중심으로 13.6%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광물성연료, 철강, 자동차 등 항목을 중심으로 3.4% 감소
- **(서비스수지)** 전년 동월 대비 3,585억 엔 감소한 ▲1,816억 엔으로 적자 전환(8개월 연속 적자),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계속되며 ‘여행수지’ 약 90% 감소
- **(제1차 소득수지)** 전년 동월 대비 2,608억 엔 증가한 1조 7,244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 ‘증권투자수익’ 증가로 흑자폭 확대로 전환
- **(제2차 소득수지)** 전년 동월 대비 1,162억 엔 감소한 ▲2,805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증권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5,933억 엔 증가

11. 일본은행 2021.1월 지역경제보고 발표

- **(3개 지역 경기판단 상향수정)** ‘21.1월 지역경제보고에서는 전국 9개 지역 중 호쿠리쿠, 시코쿠, 규슈·오키나와 3개 지역의 경기판단을 상향수정한 반면 홋카이도는 하향수정하는 등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림.
 - 감염 ‘제3파’가 발생한 홋카이도에 대해서는 ‘회복 속도 둔화 중’으로 경기판단을 하향수정했으며, 전회 조사에서 ‘어려운 상황’, ‘약한 움직임’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호쿠리쿠, 시코쿠, 규슈·오키나와에 대해서는 ‘회복 중’ 등으로 상향수정
 - 그 외 간토코신에쓰 및 긴키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회 판단 유지
 - 지난해 4월 및 7월 보고에서는 약 11년 만에 2사분기 연속으로 전 지역 경기판단을 하향수정한 바 있으나, 그 후 감염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직전인 10월 보고에서는 8개 지역의 경기판단을 상향수정
 - 업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려, 제조업은 전국적으로 견조한 추이를 보이는

반면,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업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

- **(수요항목별 기초판단)** 전체 6개 수요항목(공공투자, 설비투자, 개인소비, 주택투자, 생산, 고용·소득) 중 생산은 '09.10월 이후 11년 만에 전국 9개 지역 상향수정을 기록함.
 - 경기회복을 견인해 온 자동차 부문에 가세하여, 최근 기계 및 IT관련 부문에서도 회복 기조로, 일본은행에 의한 지역기업 청취조사에서는 '건설기계나 산업용 로봇 등 자본재 관련해서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간토코신에쓰, 범용기계), '5G 단말 등의 수요확대로 생산은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오모리, 전기기계)는 현장 의견
 -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2개 지역에서 기초판단을 하향수정, '자동차 관련 이외 투자는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다' (히로시마, 비철금속)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기업 다수
 - 서비스업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개인소비는 핫카이드를 비롯한 3개 지역에서 기초판단을 하향수정하였으며, 기업으로부터는 '감염 재확대로 손님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삿포로, 백화점), '연말연시의 회식 수요가 거의 소실돼, 매우 어려운 상황' (오사카, 음식) 등 곤경을 호소하는 의견 속출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가 종료한 이후에는 고용계약의 재검토 및 고용중지도 시야에 넣을 것' (하코다테, 숙박)이라는 기업도 나타나는 등,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고용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 **(경기 회복속도 완만)**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14 개최된 지점장회의에서 日 국내 경기 관련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회복 중'이라는 인식을 보였으며, 향후 동향 관련 '개선 기조는 이어갈 것이나 회복속도는 완만한 것에 그칠 것' 이라고 전망
 - 금번 보고에는 1.14일부터 오사카, 후쿠오카 등 7개 부현이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된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되는 가운데, 도미타 준 후쿠오카 지점장은 '대면형서비스를 중심으로

경기하방압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답보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전망

- 야마다 야스히로 오사카 지점장 역시 '음식, 숙박, 여행업은 향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고 전망하였으며, 식품업계 등 관련분야로의 파급을 경계
- 최근의 경기 상황을 반영해, 일본은행은 이달 20~21일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3 대외경제 동향

12. 일-대만 반도체 협력

- **(대만 반도체 업계는 호황)** 화웨이는 美 정부의 2020.9월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만 기업들에 최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발주, 대만의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이함.
 - 대만 기업은 기존에 애플 및 화웨이 등 세계의 주요 제조사發 수주를 통해 연구 개발 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길러온바, 美 리서치 회사 'IC Insights' 에 의하면 대만은 2019.12월 현재 반도체 생산 세계점유율 21.6%로, 한국(20.9%) 및 일본(16.0%), 중국(13.9%)을 상회하여 세계 1위를 기록
- **(대만 기업, 日 기업과의 협업 도모)** 일본계 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치 및 화학소재 점유율이 높아 대만 기업들은 일본계 기업과의 협업을 도모하고 있음.
 - TSMC 간부는 2020.11월 대만 內 일본계 기업 80개사를 모은 반도체산업 설명회에 참석,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신주(新竹)시에 최첨단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옆에서 (일본 기업이) 신속히 대응한다면 품질·비용면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계 제조기기 및 소재기업이 진출하도록 호소

- 설명회를 주최한 日 미즈호 은행은 ‘일-대만 협력을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는 기업의 문의가 많다’ 고 언급했으나, 공장 건설 등에는 거액의 투자금이 드는데다 ‘경쟁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은 일본 내에서 얻을 필요가 있다’ 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일본계 기업도 존재

□ **(대만 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은 對中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장 임대료 감면과 용자 우대 등으로 대만 기업의 중국 철수를 촉구하고 있음.

- 2020년 말까지 209개사가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대만 內 공장 건설 등 8천억 대만달러(약 2조 9천억엔)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이 중 3/4가 반도체 등 전자공업 관계 투자가 될 것으로 관측
- 차이잉원 총통은 2020.10월 연설을 통해 ‘대만은 세계의 디지털 인재, 기술의 집적지가 될 것’ 이라고 호소, 투자환경의 정비에 노력할 의지를 보임.

13. 화웨이, 독자 공급망 구축 노력

□ **(출자 확대)** 中 화웨이는 최근 1년 반 동안 반도체 관련 기업 총 20개사에 출자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관련 신흥기업 대상 출자를 확대하고 있음.

- 中 기업정보사이트 ‘企查查’ 데이터를 토대로 닷케이신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9년 설립된 투자회사 ‘하보과기투자(Harbo Technology Investment)’ 를 통해 총 25개사의 하이테크기업에 출자*했으며, 그 중 20개사가 반도체 관련 社

* 출자 비율은 3-15%

- 출자 대상 기업의 사업 분야는 반도체의 설계 지원 기기·재료·제조 및 검사 장치 등 다수로, 美 정부의 對화웨이 규제에 따라 미국산 기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스스로 반도체 공급망을 정비하려는 목적
- 하보 투자기업 중 하나로 아날로그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3PEAK’ 는

하보가 6% 주식을 취득한 지 4개월 만인 2020.9월 상하이증권거래소 내 하이테크 관련 전문주식거래소인 ‘키창반(科創板)’ 에 상장

- 관계자에 의하면 하보는 2018년 설립된 반도체 제조사 ‘SiEn(QingDao) Integrated Circuits’ 에도 출자 협상중이며 동 협상은 칭다오시도 지원 중으로, 출자 성사시 화웨이는 반도체 설계·제조·검사까지 폭넓은 공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

□ **(생산라인 구축)** 화웨이는 반도체 설계·개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후반부터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 반도체의 생산 라인을 본사가 있는 광둥성 선전시에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간 화웨이의 산하 기업인 ‘하이실리콘’ 이 스마트폰 탑재용 등의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해, 대만 TSMC에 생산을 위탁해 왔으나 美 정부가 2020.9월에 對화웨이 수출 규제를 강화, 하이실리콘에서 개발한 반도체의 실제 제조는 어려운 상황
- 화웨이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공산이나, 단기간 구축은 어려운 만큼 당분간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

4 기타

14.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한 자동차 업계 영향

□ **(반도체 부족)**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공장 가동중지 등 영향을 받은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자동차 대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日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에 들어갔으며 美포드 및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스(FCA)도 일부 공장 가동중지를 표명하는 등 영향이 확대

- 닛산 간부에 따르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1.2월 이후에도 감산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

□ (日 3社 감산 결정) 2020년 하반기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도요타·혼다·닛산 등 日 자동차 대기업 3사는 2020.11월에 2021년 1분기 실적전망치를 상향조정했으나, 반도체 제조사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감산을 결정함.

- (도요타) 도요타자동차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미국 내 대형 픽업트럭 ‘툰드라’ 생산량을 감산할 방침을 밝히고 수익성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호조세인 SUV ‘RAV4’ 등 인기 차종에 부품이 우선 공급되도록 조율 중임.

- 도요타는 당초 2019년 1분기 대비 15% 증가한 약 227만대를 2021년 1분기 중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동 계획 재검토 가능성 부상

- (혼다) 혼다도 일본 내 소형차 ‘피트’ 감산에 이어 2021.1월에 중국에서만 3만 대 이상 감산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혔으며, 혼다는 세계 판매량 중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

- (닛산) 닛산의 日 국내 주력차종인 소형차 ‘노트’ 는 닛산 내수 판매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경차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이며 2020.12월에는 신형 하이브리드차(HV)가 투입되는 등 기대가 높았으나, 2021.1월부터 월 생산량 약 15,000대 중 5,000대 이상 감산할 예정

15. 日, LNG 확보 고전

□ 동아시아를 습격한 한파는 국지적 LNG 수요 증가를 초래한바, LNG 아시아 스팟(수시 계약) 가격이 2021.1월 중순 현재 100만 BTU 당 30달러를 넘어서며 1개월 전의 3배로 급등함.

- 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환경대책을 동시 추진하는 중

국이 LNG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되는 점으로, 중국은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연료로서 가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

- 중국의 LNG 수입량이 세계 LNG 교역량의 20%를 수입하는 최대 수요국 일본을 제친다면, 조달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

※ 중국의 2020.1~11월 LNG 수입량은 누계 약 5,95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반면, 일본은 同 6,670만톤으로 약 5% 감소, 수년 후 중국이 세계 최대 LNG 수요국이 될 것이라는 견해 부상

- 日 종합상사는 미국 등으로부터 LNG 구입을 모색 중이나, 한파 영향으로 유럽 등지에서도 LNG 조달이 늘어나며 세계적으로 선박 수급의 팽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호주發-일본着 탱크 운임은 100만 BTU 당 1.45달러로 1개월 간 50% 이상 상승

□ LNG는 기체 천연가스를 섭씨 -162도로 냉각시켜 수송하나, 기화되는 특성상 재고를 대량으로 쌓아둘 수 없는데 더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전력사의 재고량도 줄어든 가운데, 세계적 LNG 쟁탈전은 평상시 조달 전략이 예측불가 사태에는 대응이 불가능한 일본 조달망의 취약성을 노정시킴.

- 일본의 LNG 화력 의존도는 현재 약 40%로 높은 수준으로, 간사이전력 등 대형 전력사는 가스회사 등으로부터 LNG를 용통하거나 재고가 부족한 발전소로 내항선의 하역지를 변경하는 등 대응 중

- 한편, LNG는 ‘도착지 조항’ 등의 영향으로 다국간 용통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들어 미국에서 잇따른 셰일 가스 본격 생산 등 영향으로 LNG 판매처를 한정하지 않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바, 산업 관계자들 내에는 ‘소비국 및 기업이 협조하여 LNG를 구입해 상호 용통하는 체제가 늘어나도 좋을 것’ 이라는 의견도 존재